

2014 국회8급 행정학 (2014.6.14 시행)

선행정학 교재와 강의에서 100% 완벽적중되었다. 최근 선행정학 기본이론수업이나 동형문풀강좌를 수강했던 수험생이라면 그 위력을 충분히 실감했었을 출제였으며, 결코 평이한 수준의 출제는 아니었지만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했느냐의 방식에 따라 쉽게도 어렵게도 느껴졌을 수 있는 출제였다. 기출문제는 암기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문제가 상당수 있었으나, 선행정학 기본이론 수업을 통해 전반적인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마지막 동형문풀까지 커리를 충실히 배운 수험생들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출제였다. 기출문제와 일부 지문이 유사한 2~3문항 외에는 기출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다. 기본이론 수업이나 문풀강좌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다수 출제되었는데, 예컨대 문1의 엘리너 오스트롬의 노벨상 수상 공유재이론, 문3의 House의 경로목표리더십모형, 주의를 당부한 개정된 국가재정법상 변경된 예산일정도 문9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또한 문13의 갈등해결 방안과 조장방안의 구분문제, 특히 문14의 징계관련문제의 경우 최근 동형문풀에서 강등과 강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부분과 징계소멸시효 등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문23의 지방재정지표의 경우도 수업때 강조한 지표별 용도가 출제되었다. 분야별로 고루 출제되었으며 분야별 출제비중은 다음과 같다.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환류	자치
5	4	4	3	4	2	3

- 김중규 -

01. 다음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의료, 교육과 같은 가치재(worthy goods)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 ② 공유재(common goods)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③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롬(E.Ostrom)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공유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편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 ④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 ⑤ 어획자 수나 어획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방어장의 경우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답] ③ E.Ostrom은 Elinor Ostrom은 1983년 '제도적 분석의 방법 - 규칙, 게임 그리고 공유자원(Rules, Games & Common-pool Resources)'에서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보고 그 행위규칙, 즉 제도적 장치를 중시하는 신제도론적 경제학을 행정학에 소개하였다. 공유재의 비극을 막으려면 이해당사자가 일정한 자발적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행위규칙)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유자원은 시장에 맡기거나 정부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기통치와 자기조직화 원리에 맡겨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 2014 선행정학 p. 17

02. 다음 중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답] ⑤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2014 선행정학 p. 47

03.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십 이론은 자질론으로부터 시작해 행동유형론을 거쳐 상황론으로 발전해 왔다.
- ② 거래적 리더십은 보수적 현상유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③ 하우스(House)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더를 지원적 리더라고 하였다.
- ④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중 형식적 사고와 관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촉매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 ⑤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에서는 '가장 좋아하지 않는 척도(LPC: least preferred coworker)'를 사용하는데 LPC 점수가 낮은 경우 과업지향형으로 분류한다.

[답] ③ House & Evans(1970)는 3차원 모형의 일종인 경로-목표모형(Path-Goal Model)에서 리더의 행동(원인변수)이 부하의 행동(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에서 부하의 기대감과 유인가가 매개를 하며(매개변수) 아울러 부하의 특성과 작업환경요인이 상황변수로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하우스(House)는 의사결정에 부하의견을 반영하며, 부하가 참여를 통해 과업과 역할기대를 학습하도록 하는 리더를 참여적 리더라고 하였다.

■ 원인변수로서 리더의 행동유형

- ① 지시적 리더십 : 부하의 활동을 계획·조직·통제·조정하는 구조조도형(initiate)
- ② 지원적 리더십 : 부하의 욕구와 복지를 생각하는 배려형(consider)
- ③ 참여적 리더십 : 의사결정에 부하의견을 반영하며, 부하가 참여를 통하여 과업과 역할기대를 학습하도록 하는 유형
- ④ 성취지향적 리더십 : 부하들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주고 성과를 확인하는 유형

☞ 2014 선행정학 p. 29

04. 다음 중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총괄예산제도는 구체적인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신축적 집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② 계속비제도는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제조·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집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③ 이월제도는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넘겨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 ④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제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 ⑤ 수입대체경비는 과년도 수입과 지출금을 반납하는 것이다.

[답] ⑤ 수입대체경비란 정부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수입을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완전성과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

구분	특징
재정 통제	예산의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
	재배정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편성준칙의 시달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총 망라하여 편성
	총사업비제도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적으로 관리
신축성 유지	이용 입법과목(장·관·항)간에 상호융통(국회의 의결을 요함)
	전용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융통
	이체 예산의 책임소관 변경
	이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사용(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 수년간예산지출(5년 이내)
	예비비 예산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예산 불성립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대통령의 제정에 관한 긴급명령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유지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다년도예산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운영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총액계상예산제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출
유지	장기계속계약제도 계속비제도에 더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당해년도 예산범위 내 계약)

☞ 2014 선행정학 p. 545

05.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모두 포괄한다.
- ②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이 되지만 제도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에 의한 정책선택의 제약을 인정한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

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 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의도가 제도변화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답]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산출물이 아니라 제도적 동형화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제도를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산출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이다.

■ 신제도론의 유파별 비교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	역사학적 신제도	사회학적 신제도
학문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개념	제도 = 개인의 합리적·전략적 선택	개별국가의 역사적 맥락, 경로의존성	사회문화 및 상징
중점	제도의 균형성	제도의 지속·상이성	제도의 유사성
차원	개인	국가	사회
측면	공식	공식	비공식
범위	좁음(미시)	중범위(거시)	넓음(거시)
변화	거래비용 감소	결절된 균형	동형화(Isomorphism)
선호	외생적	내생적	내생적
접근	연역적	귀납적	귀납적

☞ 2014 선행정학 p. 133

06. 다음 중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법의 일종인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브레인스토밍 집단은 조사되고 있는 문제상황의 본질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아이디어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③ 아이디어 평가는 첫 단계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총망라된 다음에 시작되어야 한다.
- ④ 아이디어 개발단계에서의 브레인스토밍 활동의 분위기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 ⑤ 아이디어 개발과 아이디어 평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답] ⑤ 브레인스토밍은 대면적 접촉하에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집단자유도의기법(두뇌선풍기법)으로 아이디어의 산출과 평가 두 단계로 진행이 되며 첫 단계인 아이디어 산출에서는 비판이 금지된다.

■ 직관적 예측 기법

브레인스토밍	대면적 접촉하에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집단자유도의기법(두뇌선풍기법), 비판금지, 정보다 양 중시
전통적 델파이	익명의 격리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정리하는 기법, 대면 토의 없음
정책델파이	델파이를 정책분석에 응용(다양한 참여자, 선택적 익명성, 갈등의 조성, 양극화된 통계처리 등)
교차영향분석	연관된 사건의 발생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사건의 발생확률 추정
실현가능성 분석	정치적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대안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분석
역사적 유추	과거의 유사한 문제등과의 유추(시메틱스)에 의한 유추
명목집단기법	대안제시 제한된 집단토론 표결(컴퓨터 표결시 전자적 회의기법이 됨)
변증법적 토론	찬반 두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여 대안의 장단점을 도출하는 지명만론자기법, 악마의 주장법

☞ 2014 선행정학 p. 193

07. 다음 중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 ②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일방향 서비스 제공
- ③ 민관협치 강화
-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⑤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원스톱 지원 강화

[답] ②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일방향 서비스 제공은 1.0 전자정부의 특성에 해당한다.

■ 정부 3.0 추진기본계획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3. 민관협치 강화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2014 선행정학 p. 599

08. 다음 중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정책집행자의 전문성, 사기,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 집행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②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지도력은 정책집행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③ 정책집행은 대상집단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활동이 다양한 경우 더욱 용이하다.
- ④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가 정책집행 체계의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지체된다.
- ⑤ 집행효율성은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높아질 수 있다.

[답] ③ 대상집단의 범위나 행태가 광범위하거나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정책 집행이 곤란하다.

■ 정책집행의 성공요건(Sabatie)

- 타당한 인과모형
- 명확한 지침과 대상 집단의 순응
-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
- 관련 집단의 지속적 지지
-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의 명확성과 안정성

☞ 2014 선행정학 p. 228

09. 다음 중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은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를 총칭한다.
- ②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2016년부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2016년부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답] ④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2014년도부터 예산안의 국회제출시한이 3년간 매년 10일씩 앞당겨져 2016년도부터는 1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지침 시달 일정과 예상요구서 제출일정도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10일씩 앞당겨진다.

■ 예산일정 변경

- 헌법
 - 90일 전까지 제출, 30일 전까지 의결
- 국가재정법
 - 2016년까지 매년 10일씩 앞당겨짐

	예산지침시달	예산요구서 제출	예산안 국회제출
종전	4.30 까지	6.30 까지	90일 전 까지
2014	4.20 까지	6.20 까지	100일 전 까지
2015	4.10 까지	6.10 까지	110일 전 까지
2016	3.31 까지	5.31 까지	120일 전 까지

☞ 2014 선행정학 p. 534

10. 다음 중 주인-대리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위 관료포획현상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 ② 도덕적 해이는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해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이다.
- ③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 ④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참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입법예고제도 등이 있다.
- ⑤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내부통제에서 찾고 있다.

[답] ④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참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입법예고제도 등이 있다.
 [답] ①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위 관료포획현상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② 역선택은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해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이다.
 ③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⑤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외부통제에서 찾고 있다.

■ 주인-대리인이론

이론의 전제와 대리손실
·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본인과 대리인간에 이해관계의 상충

으로 '대리손실(Agency loss)' 발생
① 역선택 현상(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
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
'대리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감시와 통제 필요
① 정보의 균형화 : 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
②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③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급 등

☞ 2014 선행정학 p. 346

11. 다음 중 정책결정의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① 비정형적인 결정의 경우 직관의 활용, 가치판단, 창의적 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조합리적 아이디어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 ②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 그 방향성 안에서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주로 적용된다.
- ④ 목표와 수단이 분리될 수 없으며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정치적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이상적인 상태를 고려한 최상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현실적인 결정을 한다.

[답] ②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모형에 입각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 그 방향성 안에서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모형에 입각하여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모형이다.

- ☑ ① 최적모형
 ③ 쓰레기통모형
 ④ 점증모형
 ⑤ 만족모형

☞ 2014 선행정학 p. 209

12. 다음 중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능률성(efficiency)은 일반적으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정의된다.
- ② 대응성(responsiveness)은 행정이 시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에 반응하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③ 가외성의 특성 중 중첩성(overlapping)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 ④ 사이먼(Simon)은 합리성을 목표와 행위를 연결하는 기술적·과정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내용적 합리성(substantive)과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구분하였다.
- ⑤ 공익에 대한 과정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는 입장

이다.

[답] ③ 중첩성(overlapping)은 기능이 여러 기관에 배타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로 행정기관이 상호의존성(협력과 간여)을 띠면서 기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은 반복성(duplication)이다.

■ 가외성

- | |
|--|
| (1) 의의 :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의 여유분
(2) 본질
① 중첩성 : 기능이 여러 기관에 배타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로 행정기관이 상호의존성(협력과 간여)을 띠면서 기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현상
② 중복성 :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
③ 동등참여력 : 주된 기관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보조기관이 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여유분
(3) 효용 : 적응성·신뢰성·안정성·창조성 확보 |
|--|

☞ 2014 선행정학 p. 82

13. 다음 중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 간 갈등의 해결은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 ② 행태주의적 관점은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③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④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갈등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⑤ 지위부조화는 행동주체 간의 교호작용을 예측불가능하게 하여 갈등을 야기한다.

[답] ①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는 갈등의 해결방안이 아닌 갈등의 조장방안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화된 조직을 통해 합해야 한다.

☞ 2014 선행정학 p. 289

14. 공무원 징계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 |
|--|
| 가. 강입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는 것이다.
나.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다. 급품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리. 징계에 대한 불복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가 가능하나 근무성적평정결과나 승진탈락 등은 소청대상이 아니다. |
|--|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리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리

[답] ④ 리만 옳다.

☑ 가. 강입은 징계가 아니며, 직제·정원이 변경된 경우 강입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는 것인 강등이다.

- ㄴ.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권면직 대상이다.
- ㄷ. 일반적인 정계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인한 정계의결요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 정계의 종류

- 건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 감봉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 정직 - 1~3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 강등 - 1계급 하향조정(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신분은 보유,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영향 X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제한

☞ 2014 선행정학 p. 448

15. 조직 유형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민츠버그(Mintzberg)의 전문적 관료제는 낮은 공식화와 집권을 특성으로 가진다.
- ㄴ. 콕스(Cox, Jr)의 다문화적 조직은 다른 문화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만 집단간 갈등수준은 상당히 높다.
- ㄷ. 애드호크라는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낮은 조직구조형태를 띠고 있다.
- ㄹ. 정보화사회에서는 삼엽조직이나 공동화조직이 확대되고 기획 및 조정기능의 위임과 위탁을 통해 업무가 간소화되기도 한다.
- ㅁ. 사업구조는 부서내 기능간 조정은 용이하나 부서간 조정이 곤란하여 사업영역간 갈등이 발생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답] ② ㄷ, ㅁ만 옳다.

- ☑ ㄱ. 민츠버그(Mintzberg)의 전문적 관료제는 낮은 공식화와 수직적·수평적 분권을 특성으로 한다.
- ㄴ. 콕스(Cox, Jr)의 다문화적 조직은 다른 문화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만 집단간 갈등수준은 상당히 낮다.
- ㄷ. 정보화사회에서는 삼엽조직이나 공동화조직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기획 및 조정기능을 제외한 부수적인 기능의 위임과 위탁을 통해 업무가 간소화되기도 한다.

☞ 2014 선행정학 p. 263

16.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 ② 기능별 예산제도 또는 활동별 예산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③ 관리지향성을 지니며 예산관리를 포함하는 행정관리작용의 능률을 지향한다.
- ④ 예산관리기능의 집권화를 추구한다.

⑤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책임은 묻는 데 용이하다.

[답] ⑤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하고 회계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며 공금관리가 곤란하다. 회계책임을 묻기 위한 재정통제가 용이한 예산은 품목별예산제도(LIBS)이다.

■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내부통제 합리화 (행정부 힘살어주기) ·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국민 이해 용이) · 장기계획 수립에 유리 · 합리적·효율적 자원배분	· 의회통제 /재정통제 곤란 · 장기 계획과의 연계보다 개별 단위사업 중심 · 대안적·합리적 검토 곤란 (합리모형 X)

☞ 2014 선행정학 p. 514

17.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다원주의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정책이 결정된다.
- ㄴ. 바흐라흐(Bachrach)등이 제시한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다원론에 해당한다.
- ㄷ. 밀스(Mills)의 지위접근법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 ㄹ. 조합주의는 국가의 독자성, 지도적·개입적 역할을 강조한다.
- ㅁ. 다원주의는 사회중심적 접근방법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답] ③ ㄱ, ㄷ, ㅁ만 옳다.

- ☑ ㄴ. 바흐라흐(Bachrach)등이 제시한 무의사결정론은 R.Dahl의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엘리트이론에 해당한다.
- ㄷ.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은 Mills의 지위접근법이 아니라 Hunter의 명성접근법이다.

☞ 2014 선행정학 p. 168

18.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에 기반한다.
- ② 신공공관리론은 기업이 정신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사회적 기여와 봉사를 강조한다.
- ③ 신공공관리론의 대상이 고객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의 대상은 시민이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이 신공공관리론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더 적합한 이론이다.
- ⑤ 신공공관리론이 신공공서비스론보다 행정책임의 복잡성을 중시하며 행정재량권을 강조한다.

[답] ⑤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책임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강조하였으며 행정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된다고 주장하였다.

■ 신공공관리 vs (뉴)거버넌스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 · 참여주의
관리기구 (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감동과 경쟁 (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 (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 (시민 · 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 2014 선행정학 p. 145

19. 다음 중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은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한다.
- ③ 일반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지만,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혼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⑤ 특별회계는 예산 단일성 및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답] ① 국가재정법 제4조 3항에서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특별회계의 장단점

장점	· 정부수지의 명확화 · 재정운영의 자율성 · 행정기능의 전문·다양화에 부응
단점	· 예산구조와 체계의 복잡화 ·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연결되어 재정 간막이 발생 · 재정통제 약화 : 입법통제나 민주통제의 곤란 · 재정팽창의 수단 : 목적세와 함께 재정팽창의 원인

☞ 2014 선행정학 p. 489

20.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의 체결한 성과계약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 ② 정부의 근무성적평정방법은 다원화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③ 행태기준척도법은 평정의 임의성과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도표식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한 방식이다.

- ④ 다면평가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이 가능하게 하며, 평정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 쉽다.
- ⑤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연쇄적 착오라 한다.

[답]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정대상은 5급 이하 공무원이며 4급 이상 공무원은 업무목표(성과계약) 달성도에 의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한다.

■ 근무성적평정 방법

평정방법	개념	단점
산출기록법	일정 기간 생산고(근무실적)를 수량적으로 평가	
주기검사법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의 생산 기록 측정	
도표식평정척도법	가장 많이 이용되며 한편에는 실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를, 다른 한편에는 우열을 표시	등급 간 기준 모호, 연쇄효과
강제선택법 (체크리스트법)	4~5개의 체크리스트 단문 중 강제선택	평정항목 작성 곤란 및 항목이 많을 경우 혼란
강제배분법	집단적 서열법으로 우열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 뒤 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	역산식 평정 가능성
중요사건기록법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들을 평정	이례적 행동 강조 위험
행태기준척도법	평정의 임의성·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표식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	
행태관찰척도법	행태기준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	도표식 척도법의 한계
목표관리법	근무과정이나 태도보다는 결과중심의 평정	
평정주체별		
감독자 평정	상급자가 평정하는 전통적 방법, 수직적 계층구조가 강한 기계적 구조에 적합	
다면(집단)평정	감독자뿐 아니라 부하, 동료, 민원인까지를 평정주체로 참여시키는 방법 (전방위평정)	

☞ 2014 선행정학 p. 424

21. 다음 <보기>의 지방세 중 자치구세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재산세	ㄴ. 주민세
ㄷ. 지방소득세	ㄹ. 등록면허세
ㅁ. 담배소비세	ㅎ. 레저세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답] ② 현행 지방세의 자치구세에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해당된다.

■ 지방세목 체계

구분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2014 선행정학 p. 654

2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관리와 관리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적 시각을 반영한다.
- ② 직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 ③ 국 단위기구까지 자율성이 인정된다.
- ④ 계급에 따른 인력 운영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재량권이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 ⑤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답] ③ 총액인건비제는 국단위 이상 기구는 대통령령(직제)에 규정되어 운영하되 과단위기구만 자율성이 인정된다.

☞ 2014 선행정학 p. 444

23.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 ② 국고보조금은 행정서비스의 구역외 확산에 대처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 ③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 ④ 재정자립도를 산정할 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에 속한다.
- 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기준지표는 지방재정자립도이다.

[답] 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기준지표는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이다.

■ 주요 지방재정지표

재정 규모 (재정력)	지주재원 + 의존재원+ 지방채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재정 자립도	(지방세 + 세외수입)/일반회계총세입	자립도가 높더라도 재정이 건전하다 할 수 없다. (재정규모, 세출의 질, 실질적 재정상태, 정부지원규모 내역 알 수 없기 때문)
재정력 지수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지수가 클수록 재정력이 좋다. 보통교부세 교부여부 결정기준
재정 자주도	일반재원 / 일반회계총세입	차등보조금 교부기준, 재정자립도 미반영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원	내국세의 19.24%(부동산교부세 제외) - 기준에 의한 보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 - 재량에 의한 보조
용도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 (기본행정수요경비)	특정재원으로 구체적인 목적 사업 (국가정책과 정책적 고려)
지방비 부담	없음 (정액보조) - 현금보조적 성격	있음 (정률보조) - 현물보조적 성격
재량(통제)	많음 (약함)	거의 없음 (강함)
기능	재정의 형평화 (형평화 보조금)	자원배분의 효율화 (효율화 보조금)

조정성 성격	수직적·수평적 재원	조정	수직적 조정재원
--------	------------	----	----------

☞ 2014 선행정학 p. 658

24.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청구권
- ②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
- ③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⑤ 소속위원의 사직 허가

[답] 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청구권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서류제출요구권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4.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의회의 자율권

☞ 2014 선행정학 p. 637

25. 행정개혁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참여기회 제공
- ㄴ. 포괄적 개혁 추진
- ㄷ. 구성원의 부담 최소화
- ㄹ. 외부집단에 의한 개혁 추진
- ㅁ. 피개혁자 교육 및 홍보
- ㅂ. 개혁안의 명료화

- ① ㄱ, ㄴ, ㄷ, ㅁ
- ② ㄱ, ㄷ, ㅁ, ㅂ
- ③ ㄱ, ㄴ, ㄷ, ㅁ, ㅂ
- ④ ㄱ, ㄷ, ㄹ, ㅁ, ㅂ
- ⑤ ㄱ, ㄴ, ㄷ, ㄹ, ㅁ, ㅂ

[답] ② ㄴ, ㄹ은 틀리다.

☑ ㄴ, 포괄적, 전면적, 급진적 개혁은 부분적, 점진적 개혁보다 저항이 많고 성공가능성도 낮다.

ㄴ. 외부집단(국외자)에 의한 개혁보다 내부집단(국내자)에 의한 개혁이 저항이 약하다.

■ 행정개혁시 저항극복전략

① 규범적·사회적 전략	· 참여의 확대 · 의사소통의 촉진 · 집단토론과 사전훈련 · 카리스마나 상징의 활용 · 충분한 시간 부여
② 공리적·기술적 전략	· 개혁의 점진적 추진 · 적절한 범위와 시기의 선택 ·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 개혁방법·기술의 수정 · 적절한 인사배치 · 호혜적 전략 · 손실의 최소화와 보상의 명확화
③ 강제적·물리적 전략	· 의식적인 긴장 조성 · 물리적 제재나 압력 사용 · 상급자의 권력 행사

☞ 2014 선행정학 p. 581